

민생 강조하는 한동훈 “금투세 폐지, 힘 실어주길 바라”

한, 전의교협 만나 현안 논의 나서
강대강 대치에 여론 악화 차단 취지
총선서 금투세폐지 발목잡는 野 심판
민생특위 구성해 민생경제 대안 제시

국민의힘이 24일 4·10 총선을 17일 앞두고 ‘민생·경제’를 전면에 내걸었다. 이는 용산발(發) 악재를 넘고 ‘민생을 챙기는 것은 여당’이라는 점을 강조해 지지율을 제고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특히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인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의 대중원 갈등의 해결책을 찾기 위해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를 만나고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공약을 언급하는 등 전면에 나섰다.

한동훈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에서 “제가 오늘 오후 전의교협 간부들과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서 만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20개 전국 의대 교수들은 정부의 의대 증원방침에 오는 25일 시작서를 제출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다. 전의교협 역시 의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중앙당사에서 출근길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뉴스1

증원 취소소송과 집단 사직 등을 예고한 바 있어, 협상의 여지를 찾기 위한 노력으로 보인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회의 직후 한 위원장과 김창수 전의교협 회장의 만남에 대해 “그쪽(전의교협)에서 먼저 연락이 왔다”며 “예단해서 말하기는 어려우나 진정성 있는 자세로 대화의 물꼬를 틀어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정부와 의료계의 강대강 대치에

여론이 악화되는 것을 차단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또 한 위원장은 이날 총선 공약인 ‘금투세 폐지’를 언급했다. 그는 회의에서 “국민의힘이 1400만 투자자의 힘이 되겠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반드시 해내겠다”며 “이미 주식거래세가 있는 상황에서 투자소득까지 과세한다면 투자자 이탈이 우려되고 자본시장 침체로 오히려 세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금투세 폐지법안, 소득세법 개정안을 제출했지만 거대야당인 민주당이 반대해 통과되지 않고 폐기될 상황”이라며 “이번 총선에서 금투세 폐지에 발목 잡는 민주당을 반드시 심판하고 국민의힘이 금투세를 폐지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기를 바란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한 위원장의 이같은 행보는 최근 고물가로 인해 혐악해진 민심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민생·경제를 강조하는 것으로 보인다. 거기에 이종섭 주호주대사 출국과 황상무 전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의 ‘회칼 발언’ 등의 악재를 넘어 집권여당의 면모를 선거판에서 돋보이기 위함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국민의힘은 전날 고물가와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민생경제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특위 위원장으로는 경제부총리를 역임한 추경호 의원과 유일호 전 의원이 맡았다. 특위는 민생경제 문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꾸러졌다.

국민의힘은 “말로만 민생을 말하고, 정치 선동으로 민생을 도외시키는 더불어민주당에 맞서 국민의힘은 함께 잘사는 동료시민의 길을 제시하겠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나아가 ‘민생은 여당, 정쟁은 야당’이라는 프레임을 제시하고 있다. 한 위원장은 이날 국민의힘 중앙당사 출근길에서 ‘당 지지율을 끌어올릴 묘책이 있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묘책은 없다. 그러나 진심을 가지고 시민을 위한 정책을 계속 하겠다”면서 “더불어민주당의 모든 정책은 ‘난장판을 치자’, ‘깡판 치자’ 이런 류”라고 말했다.

그는 “저희는 그래서 안된다. 혼란이 있어서는 나라가 전진할 수 없다”며 “(민주당은) 저런 식의 극단적인 대결만을 이야기 하는 세력이고, 공공연하게 탄핵을 이야기한다. 과거 탄핵 이야기 할 때 역풍을 우려해서 꺼내지 않는 게 정치의 섭리였는데, 공공연히 당대표부터 다 하고 있다”며 “그런 세력을 상대할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한 싸움에서 물러나지 않는 것도 필요하지만, 저희는 민생과 경제라는 중요한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발언은 “말로만 민생을 말하고, 정치 선동으로 민생을 도외시키는 더불어민주당에 맞서 국민의힘은 함께 잘사는 동료시민의 길을 제시하겠다”고 주장했다. /서재진 기자 syj@metroseoul.co.kr

“국민 모두에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이재명, 서울 송파·강남·서초 찾아
“가계 소득 지원 통해 소비 늘려야”
지역화폐로 지급… 예산 13兆 예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서울에서 당의 협지로 꼽히는 송파구, 강남구, 서초구 등을 찾으며 “민주당은 민생경제 비상사태 해결을 위해 국민 모두에게 1인당 25만원, 가구당 평균 100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총선을 앞두고 치솟은 서민 물가에 정부가 고심하는 가운데, 민주당이 지역화폐 지급 공약을 내걸며 정부여당을 압박하는 모양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송파구 잠실 새마을전통시장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건강하던 사람의 심장이 멈추면 심폐소생술을 해야 다시 살아난다”며 “가계 소득 지원을 통해 소비를 늘리고 이것이 멈춘 경제가 다시 움직이도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서울 송파구 잠실 새마을전통시장을 방문해 조재희(송파갑)·송기호(송파을)·남인순(송파병) 후보와 함께 인사를 하고 있다. /뉴스1

만드는 민생 경제 CPR,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때”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게는 1인당 10만원의 추가 지급을 추진하겠다”며 “특히, 신종코로나바이러스 대 유행 때 재난지원금처럼, 민생회복지원금도 지역화폐로 지급하도

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코로나19 당시 경기도지사로서 도정을 펼친 바 있는 이 대표는 “우리는 지난 코로나(유행) 시기에 이미 경험했다. 모두가 죽겠다 할 때, 가구당 약 100만원이 안 되는 돈을 지역화폐로 지급했더니, 동네가 6개월 동안 활황을 겪었다”

며 “오히려 전보다 매출이 늘어서 살만했다는 생각이 들었을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민생회복지원금에 들어가는 예산을 약 13조원으로 예상했다. 그는 “윤석열 정권이 퍼준 부자감세와 민생 없는 민생토론회에서 밝혔던 기만적 선심공약의 이행에 드는 900조~1000조에 비하면 정말 새발의 피에 불과하다”면서 “그보다 적은 약 13조원 정도로 죽어가는 민생경제와 소상공인, 골목경제, 지방경제를 살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른 나라들도 이미 이와 유사한 정책처방을 했다. 우리만 하나는 거심 아니다. 대만을 예로 들면, 지난해 민생경제 활력 차원에서 국민 한 명당 딱 우리 돈 25만원 수준의 ‘경제성과금’이라는 이름의 지원금을 지급했다”면서 “IMF(외환위기) 이후 최대 경제 위기에 직면한 대한민국 입장에서 주의 깊게 봐야 할 부분이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

한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 준비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과 정부여당에 촉구한다. 선거보다 민생이 더 중요하다”면서 “정치인들의 삶보다 국민들의 삶이 훨씬 중요하단 말씀을 드린다. 전국을 돌면서 대통령이 선거를 돕는 관련 선거, 부정선거에 몰두할 때가 아니다. 민생경제의 생사를 가를 끝판타임을 지금 허비해선 안 된다”고 했다.

또한 “진정으로 민생을 생각한다면 사기성 약속으로 국민을 속일 공리를 하지 말고, 실질적인 민생경제 회복 해법 마련에 힘을 보태야 한다. 민생회복지원 추경 논의에 즉각 착수할 것을 공식 요청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대표는 17일 앞으로 다가온 선거를 언급하면서 “잘했으면 상을 주고, 못했으면 확실하게 벌을 줘야 대의민주주의 체제가 유지될 수 있다”며 “지난 2년 동안 잘했다면 현상대로 유지하라고 표를 주고, 만약 지난 2년 동안 잘못했다. 무능했다. 국민을 무시했다.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되면 확실하게 표를 주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태홍 기자 pth7285@

전상범 “GTX-C, 수유역 연장”… 전문가 “노선 취지와 달라”

(서울 강북갑 8 후보)

GTX, 서울 집중현상 완화 위한 것
비용도 정부 아닌 지자체가 부담해야

서울 강북갑 전상범 국민의힘 후보가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 공약으로 ‘GTX(수도권 광역급행철도)-C 노선의 수유역 연장’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러나 해당 공약은 서울 집중 완화와 수도권 전역 30분 출퇴근 실현이라는 GTX-C 노선의 취지와 맞지 않아 ‘총선용 공약(空約)’이란 지적이 나온다.

전상범 후보는 지난 21일 제22대 총

선 강북구갑 후보자 등록을 마친 후 지역 주민에게 보낸 문자와 보도자료 등을 통해 GTX-C 노선의 정착역인 광운대역에서 지선을 뽑아 수유역까지 연결하겠다고 밝혔다.

전 후보는 “광운대역과 수유역의 직선거리는 약 4.5km이다.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연결할 수 있어 실현 가능성이 크다”며 “GTX-C 노선이 연결되면 교통 인프라가 부족한 강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해당 공약의 효과에 대해 “집권

여당의 후보로서 서울시 및 중앙정부와 협력해 GTX-C 노선을 수유역에 연장함으로써 정부가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는 ‘수도권 출퇴근 30분 시대’에 강북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이와 동시에 수유역 역세권을 종합개발해 강북구 경제 활성화를 이끌 것”이라고 했다.

GTX-C 노선은 경기도 양주시 덕정역을 출발해 청량리, 삼성역 등을 지나 경기 수원시 수원역까지 86.46km를 연결하는 노선이다. 구체적으로 GTX-C

노선은 서울 도봉구의 창동역에서 서울 노원구의 광운대역을 지나 서울 성동구의 왕십리역으로 뻗는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말 승인된 GTX-C 노선의 실시계획에는 수유역 연장에 관한 내용은 없다. 국토교통부 출신 관계자는 (메트로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GTX 정착역을 신설하려는 지자체 간 갈등이 폭발할 것”이라며 “기존 노선 외에 신설역을 추가하면 정부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원안 부담 원칙으로 지자체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수유역이 속해 있는 강북구청도 GTX-C 노선보다 ‘신강북선’ 유치를 목표로

이미 지난해부터 ‘신강북선 유치추진위원회’를 만들어 활동 중이다. 강북구청 관계자는 “교통이 불편한 수도권의 1~3기 신도시를 위해 GTX를 건설해 서울 집중 현상을 완화하는 것인데 막대한 예산이 드는 사업에 갑자기 서울 내부에서 GTX의 지선을 뽑는다는 것은 개념에 대한 이해도 잘못된 것이고 현실성이 떨어지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대해 전상범 캠프 관계자는 “출퇴근도 당연히 중요한 부분이지만, 인천·경기도·강원도·충청도 등 광역생활권을 만들겠다는 것이 핵심”이라며 GTX-C 노선에 이미 반영돼있는 상록수역을 언급했다. /백태홍 기자